



의안번호	제 2008 - 1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8. 26. (제10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1
II. 추가 양형자료조사 .....	1
1. 개요 .....	1
2. 추가조사 방법 .....	2
3. 추진 경과 .....	3
III. 미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7
1. 개요 .....	7
2. 조사 현황 .....	7
3. 향후 일정 .....	8
IV.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경과 .....	8
1. 개요 .....	8
2. 개선사업의 추진내역 .....	9
3. 추진 일정 .....	10
V. 재범 위험성 양형인자 추출 연구용역 추진 경과 .....	11
1. 개요 .....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	12
3. 추진 일정 .....	13

---

VI. 공청회 개최 계획 .....	14
1. 개요 .....	14
2. 관련 규정 .....	15
3. 개최 계획(안) .....	16
VII. 전문위원 업무 지원 .....	17
1.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	17
2. 전문위원 회의 지원 .....	17
3. 외부통계 전문가를 통한 분석업무 지원 .....	18
4. 전문위원 회의실 설치 .....	18
VIII. 소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 검토 .....	20
1. 보고 경위 .....	20
2. 소위원회의 필요성 .....	20
3. 관련 규정 .....	20
4. 소위원회의 성격 .....	21
5. 소위원회의 구성 .....	21
6. 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22
7. 소위원회의 운영 .....	22
8. 소위원회의 구성시기 .....	23
9. 결론 .....	23
10.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상일정 .....	24
11. 소위원회 구성안 .....	24
12. 각종 위원회와의 비교 .....	24

## 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별첨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분석 보고」 참조

## II. 추가 양형자료조사

### 1. 개요

#### 가. 필요성

- 위원회 9차 회의(2008. 7. 8.)에서 제1기 위원회가 기준 설정할 대상범죄가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본격 착수할 예정
  - 대상범죄 : 살인, 성범죄, 강도, 뇌물, 위증·무고, 횡령·배임
- 대상범죄에 대한 기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을 토대로 적절한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보충자료를 제공
-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양형기준안 연구 진행에 기여

#### 나. 고려 사항

- 과거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추가 조사결과는 개별죄명별 기준설정 연구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그밖에 위원회 일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한 범위의 추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

## 2. 추가조사 방법

### 가. 조사대상 :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

- 판결문은 재판부가 실제 양형과정에서 고려한 양형인자가 가장 객관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대상자료에 해당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총괄팀 회의(08. 7. 17. 및 7. 28.)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08. 8. 19.)에서도 적절한 조사방법으로 논의되었음

### 나. 추가조사건수

#### (1) 최소 조사건수

- 범죄유형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본범죄를 선정
- 기본범죄는 200건, 나머지 개별범죄는 50건을 최소 조사건수로 정하고, 최소 조사건수에 미달하는 사건 수만큼 추가조사를 실시
- 해당 범죄유형의 전체 사건 수에서 개별범죄의 사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sup>1)</sup>인 개별범죄는 제외
  - 다만, 특히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개별범죄는 포함
- 범죄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포함시키기에 부적합한 개별범죄는 제외

#### (2) 단일범 위주 조사

- 2007년도 접수 사건 중 단일범 위주로 조사를 진행
- 2007년도 전체 단일범 사건 수가 최소 건수에 미달되면 그 전 해의 단일범 사건을 조사

---

1) 20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함

- 2004년 ~ 2007년 사이의 전체 단일범 사건 수가 최소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전체 건수만을 조사

### (3) 실제 조사건수

- 아래 ‘추가조사건수 표’ 기재와 같음

## 3. 추진 경과

- 판결문 추출 : 8. 4. ~ 8. 8.
- 양형자료조사 : 8. 11. ~ 8. 19.
  - 조사인원 16명 : 320건 ~ 480건 / 1일
- 양형자료입력 : 8. 20. ~ 8. 28.
  - 입력요원 8명 : 200건 ~ 240건 / 1일
- 양형자료분석 : 8. 29. ~ 9. 12.
  - ※ 살인, 성범죄, 강도, 뇌물죄에 대하여 입력 및 분석 우선 실시
  - ※ 현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
    - 범죄경력조회 입수가 늦어질 경우 예정보다 지체될 수 있음

◆ 추가조사건수 ◆

범죄분류	죄명	최소건수	확정사건 조사건수	예정 추가 조사건수	실제 추가 조사건수	비고
살인	살인(기본)	200	70	130	133	
	살인미수	200	75	125	127	최소건수(50 → 200건)
	존속살해	50	20	30	30	
강간	강간(기본)	200	30	170	105	존강간 포함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강간미수	50	20	30	30	
	강간상해·치상	50	160	0	0	
	강도강간	50	20	30	18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50	10	40	43	
	성폭력범죄(강간상해·치상)	50	40	10	1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	50	15	35	36	
	성폭력범죄(절도강간)	50	10	40	13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	50	40	10	1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50	20	30	30	
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수강간)	50	70	0	0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	50	60	0	0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	50	30	20	21	
	강제추행(기본)	200	80	120	120	



범죄분류	죄명	최소건수	확정사건 조사건수	예정 추가 조사건수	실제 추가 조사건수	비고
	강제추행상해·치상	50	70	0	0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0	60	0	0	
	성폭력범죄(강제추행상해·치상)	50	8	42	31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50	40	10	10	
	성폭력범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50	2	48	17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제추행)	50	6	44	46	
	성폭력범죄(절도강제추행)	50	10	40	12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제추행)	50	25	25	2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50	10	40	4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0	25	25	29	
	준강제추행	50	70	0	0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제추행)	50	25	25	27	
	강도(기본)	200	40	160	153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강도미수	50	25	25	25	
강도	강도상해·치상	50	170	0	0	
	강도예비	50	25	25	25	
	준강도	50	30	20	20	
	특가범(강도)	50	10	40	5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범죄분류	죄명	최소건수	확정사건 조사건수	예정 추가 조사건수	실제 추가 조사건수	비고
	특가범(강도상해재범)	50	10	40	3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특수강도	100	90	10	10	최소건수(50 → 100건)
	특수강도미수	20	0	20	20	최소건수 신설
	강도살인	50	0	50	29	최소건수 신설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뇌물	뇌물공여	50	50	0	0	
	뇌물수수(기본)	200	70	130	134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50	0	50	24	완료(2004년 이후 전수조사)
	특가범(뇌물)	50	25	25	25	
횡령	업무상횡령(기본)	200	540	0	0	
	특경가범(횡령)	50	40	10	11	
	횡령	50	280	0	0	
	배임	50	110	0	0	
배임	업무상배임(기본)	200	100	100	102	
	특경가범(배임)	50	30	20	21	
위증	위증(기본)	200	170	30	30	
	위증교사	50	40	10	10	
무고	무고(기본)	200	320	0	0	
	합 계			1,884	1,612	

### Ⅲ. 미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1. 개요

- 조사 일시 : 2008. 7. 7. ~ 7. 17.
- 조사 주체 :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14명)
- 조사 대상
  - 2008. 7. 11.부터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확정된 최초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따라 조사 시행
  - 종전 조사대상 중 마약, 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범죄를 제외하고, 강도, 위증·무고, 횡령·배임 범죄를 추가

#### 2. 조사 현황

(단위 : 건, 기간 : 2008. 7. 7. ~ 2008. 7. 17.)

	살인	성범죄	뇌물	마약	교통	특가(도주)	강도	위증	무고	횡령	배임	계
합의	20	90	8	1	0	0	22	0	0	3	7	151
단독	0	18	1	39	49	30	1	19	23	45	6	231

#### ○ 2008년 누계 현황

(단위 : 건, 기간 : 2008. 1. 1. ~ 2008. 7. 17.)

	살인	성범죄	뇌물	마약	교통	특가(도주)	강도	위증	무고	횡령	배임	계
합의	94	298	28	21	2	2	22	0	0	3	7	477
단독	0	38	5	421	731	535	1	19	23	45	6	1,824
누계	94	336	33	442	733	537	23	19	23	48	13	2,301

### 3. 향후 일정

- 2008. 7. 2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급 법원 분석관들이 추가 양형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조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임
- 위 업무 수행 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

## IV.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경과

### 1. 개요

#### 가.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 현황

-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기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주도하에 개발되어 2007. 8. 7.경 개통
- 양형자료분석관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하여 양형자료를 조사한 후 이를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 위원회 제4차 회의(07. 10. 8.)에서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입력을 위하여 양형인자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입력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의결됨
  - 다만,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엑셀을 활용한 간이한 입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이에 양형인자 보완 작업 외에도 양형정보에 대한 통계분석기능 및 양형인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석업무시

스텝 개발에 착수

## 나.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 대상범죄별로 양형인자 수집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입력 대책 마련이 필요
- 시스템의 확장성 부족으로 입력 범죄유형의 확대 및 양형인자의 세분화나 추가·변경 등이 사실상 불가능
- 대상범죄나 미입력 범죄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부재
- 프로그램의 입력 및 통계분석 관련 기능의 사용자 편의성이 미흡함

## 2. 개선사업의 추진내역

### 가. 추진목표

-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형기준의 설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양형자료의 수집·축적 및 분석이 필수적임
- 대상 범죄유형, 공통·개별양형인자의 확대 등 변동 사항이 많은 업무 특성에 비추어 사용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나. 사업범위

- 양형인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범죄유형 또는 공통·개별양형인자의 추가 및 삭제, 가중·감경사유의 확대 및 변경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단독범 126개, 경합범 158개 범죄유형에 대하여 공통·개별양형인자의 일

부 변경 및 새로운 양형인자의 추가가 필요

○ 양형정보 통계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형식의 통계분석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입력된 자료 전체에 대하여 통계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능 개발
- 사용자 접속/검색 건수, 시스템별 입력/검색 건수, 법원별 양형인자 입력 건수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제공

○ 구체적 시스템 개선사항

- 효율적인 양형인자 입력시스템 구축
  - 입력 완료된 자료에 대한 수정 기능 부여
  - 입력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인자체크 방식 채택
  - 양형인자 상호관계를 고려한 양형인자 입력화면 구성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양형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 항소심 입력기능 추가 등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 양형인자 수집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력대상 범죄유형 중 미입력 사건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다. 기대효과

- 메타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을 향상
- 능동적인 양형인자 입력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됨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설정과 양형정책 수립에 기여

## 3.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 (주)로앤비

○ 계약체결 : 2008. 7. 17.

○ 계약금액 : 2억 8,500만 원 중 일부

※ 법원의 양형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위 금액은 전체 사업에 대한 액수임

○ 사업기간 : 계약일 ~ 2008. 12. 20.(예정)

## V. 재범 위험성 양형인자 추출 연구용역 추진 경과

### 1. 개요

#### 가. 연구의 필요성

- 재범의 위험성 평가는 형사사법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짐
  -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대한 판단
  - 형 선고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 가석방결정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등
- 기존에 이루어진 재범 위험성 판단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관 등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음
-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양형기준 또는 양형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나. 추진 경위

- 본래 2008년 전문위원 2팀 과제로서 주무전문위원이 조은경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8. 7. 조은경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용역 과제로 전환하기로 함

- 2팀에서는 향후 제출될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종료하기로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범죄자가 형선고 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 재범을 저지른 경우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장기간 생활한 경우를 추적하여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
- 표본 선정
  - 조사 대상 범죄 : 강간, 강도
  - 표본 표집 기간 : 1999. 1. 1. ~ 1999. 12. 31. 사이에 강간범죄 혹은 강도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우선 표집
  - 표본 크기 : 총 877명
- 재범 추적
  - 선정된 표본의 재범 추적 기간 : 유죄선고 후 8년 정도
  - 재범 확인 : 동종범죄 혹은 이종범죄 재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는지 확인
- 자료수집방법
  - 표본에 대한 정보는 판결문, 판결전 보고서, 송치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참고인 진술조서, 고소장, 공소장, 범죄인지보고서 등), 소년기록, 전과 기록 등으로부터 수집
  - 재범 확인 : 수사 및 전과경력조회를 통해 확인
- 통계적 분석방법
  - 모든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를 산출하여 자료를 탐색함
  - 재범 집단과 비재범 집단의 차이를 비교 기술함
  - 로지스틱 회귀분석, 생존분석을 통해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요인들을 탐색함
  - 재범을 예측하는 인자들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탐색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의 재범을 예측해주는 양형인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양형기준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재범을 예측해주는 재범예측인자와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재범예측 인자를 구별할 수 있음
-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산출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음

### 3. 추진 일정

○ 용역계약 상대방 : 조은경 교수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의 전문지식 활용

○ 연구기간 : 2008. 8. 1. ~ 2008. 12. 31.(예정)

## VI. 공청회 개최계획

###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마련 중임

#### ◆ 양형기준 설정 절차 ◆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	양형기준안 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3	공청회 의견수렴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수렴
↓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위원회는 양형기준 의결 이전에 양형기준의 적용효과를 고려
↓			
5	양형기준안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 2.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1. 전문위원의 양형기준 초안 작성
2. 양형기준안 작성
3.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4. 양형기준안의 수정
5. 양형기준의 의결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양형기준 의결 전의 고려사항)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의결하기 전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미치는 효과, 범죄예방 및 수형자 수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개최계획(안)

#### 가. 일시

- 개최 일시 : 2008. 11. 중순
- 공청회 개최 이후에 진행될 나머지 양형기준 설정절차를 고려할 때 개최 일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움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 논의를 거쳐 양형기준안 수정 (2008. 12.경)
  - 양형기준 수정안을 기초로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및 양형기준 효과분석 (최소 2개월 소요)(2009. 2.경)
  - 양형기준 매뉴얼 보고, 양형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보고 이후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2009. 3.경)

#### 나. 장소

- 공청회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대법원 1층 대강당, 대법원 4층 대회의실, 대법원 16층 중회의실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임

※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 VII. 전문위원 업무 지원

### 1.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08. 7. 29.(화) 11:40 ~ 12:00
- 장 소 : 위원회 위원장실
- 참석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위촉대상자 : 박영식 전문위원

### 2. 전문위원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0차	2008. 8. 19. 10:10	○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추가 양형자료조사
총괄팀 회의	제7차	2008. 7. 17. 14:00	○ 1, 2팀 업무 분장 ○ 대상범죄 배분
	임시 1차	2008. 7. 28. 16:00	○ 추가 양형자료조사 ○ 대상범죄 배분 조정
1팀 회의	제16차	2008. 8. 18. 16:00	○ 대상범죄 배분 및 과제 분장 ○ 1팀 양형현황 분석
2팀 회의	제9차	2008. 8. 13. 10:20	○ 대상범죄 배분 및 과제 분장 ○ 집행유예 기준

### 3. 외부통계 전문가를 통한 분석업무 지원

#### ○ 개요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 과정에서, 통계분석을 활용해야 하는 전문위원들에게 양형과 통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통계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양형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시행 근거

- 양형위원회에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8 제1항의 ‘전문가 등’에 해당함
-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양형위원회규칙 제12조에 따라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지원 방식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양형현황 분석연구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됨

### 4. 전문위원 회의실 설치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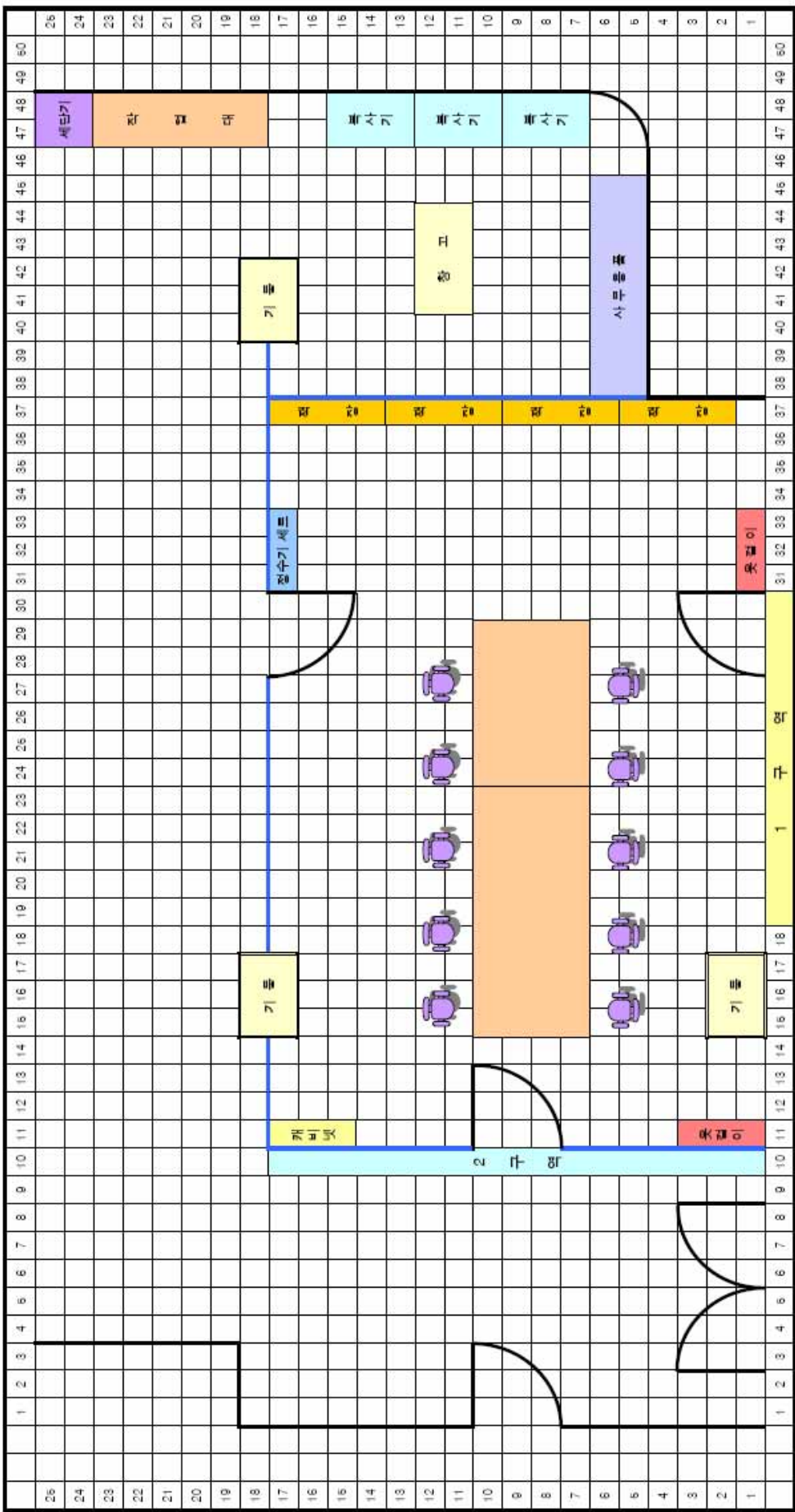
전문위원 회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전문위원 연구를 지원하고자 전문위원 회의실을 설치함

#### ○ 설치 내역

- 아래 ‘회의실 배치도’와 같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사무실 내에 회의실 설치
- 회의실 배치도 중 1, 2구역 부분에 유리창 설치
- 기타 회의실 내부 환기·조명시설 및 냉·난방시설 점검

#### ○ 공사 일정 : 2008. 8. 23. - 24.(예정)

# 회의실 배치도



## VIII. 소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 검토

### 1. 보고 경위

- 양형위원회 위원장께서 향후 양형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구체적 양형 기준안 작성 작업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
- 이에 운영지원단에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
- 당해 안건은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위원장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해당

### 2. 소위원회의 필요성

-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 보유
-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안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
- 특히,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경우 그 전문성 및 설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세밀한 검토 및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
- 소위원회 같은 다소 축소되고 잘 짜여진 회의체에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도모 가능

### 3. 관련 규정

- 운영규정
  - ▶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 운영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 ▶ 기타 소위원회 관련 :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5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등

#### ○ 전문위원 운영방침

- ▶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전문위원의 보고 방법에 관한 규정
- ▶ 전문위원의 소위원회 회의 배석에 관한 규정 등

### 4. 소위원회의 성격

- 양형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치·운영되는 기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의하는 비상설적·한시적 기구

- 구체적 양형기준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경우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안마다 별개의 소위원회 구성 가능

### 5. 소위원회의 구성

#### 가. 구성 권한

- 소위원회 설치를 결정할 권한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보유(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할 권한 역시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보유(운영규정 제13조 제3항)
-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원회의 동의 절차는 불요

☞ 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위원회 통할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에게 그 구성 여부에 관한 탄력적인 권한이 부여

## 나. 구성원 배분

-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인적 구성이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2인, 학식·경험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시 이러한 직역 분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

## 다. 구성원 규모

-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

## 6. 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소위원회는 심의 권한만 보유
  - ☞ 의결권까지 부여할 경우 위원회가 형해화할 우려 반영
- 심의를 종결한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필요시 심의 종결 전이라도 진행상황 보고,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 보고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
- 보고 방식은 서면 작성과 함께 간략한 구두보고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
-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기속
- 소위원회 또는 그 소속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 공표 불가(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 7. 소위원회의 운영

-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주재(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 전문위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배석 가능
-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단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운영규정 제14조 제4항),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특정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요청 가능(운영규정 제14조 제5항)
- 소위원회가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수석전문위원에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 가능(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어 수석전문위원 등의 보고를 듣고 심의한 뒤 적당한 때에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8. 소위원회의 구성시기

-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
-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결안건이 상정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러 번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어 있는 안건(범죄유형별 양형기준안도 그 중의 하나)의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진행 후 의결안건 상정이 불가피

## 9. 결론

-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안 작성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 도모 가능
- 또한 소위원회에서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형기준안이 지닌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 가능
- 다만, 소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소위원회가 담당하는 특정 안전 이외

의 안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므로 종전보다 회의 개최 부담이 늘어날 소지

## **10.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상일정**

- 2008. 9. 초순 : 소위원회 구성
- 2008. 9. 하순 - 10. 하순 : 양형기준안 심의
- 2008. 10. 하순(양형위원회 제12차 회의) : 심의결과 보고
- 2008. 11. 10. : 공청회  
(공청회 이후에도 양형기준안 수정 등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활동 계속 가능)

## **11. 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서기석 위원
- 위 원 : 상임위원, 길태기, 하태훈, 한인섭 위원 (남인순 위원)

## **12. 각종 위원회와의 비교**

- 아래 ‘각종 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와의 비교’ 표 참조

[illegible]

	국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양명위원회
소속	국회 소속	독립기구	독립기구	국무총리 소속	대법원 소속
근거 법규	국회법 제57조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4조, 제18조 동 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15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기본법 제6조 동 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9조, 제12조~제1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제22조	양명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5조
권한	심사권 ○ 의결권 ×	심의 · 의결권	심의 · 의결권	심의 · 의결권	심의권 ○ 의결권 ×
구성 시기 · 존속 기간	특정 사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 비상설적 · 한시적 기구 상설소위원회(각 상임위원회에 3개 씩 설치) :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된 상설위 원회)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된 상설 위원회)	고충민원의 처리 관련 5 개 분야에 소위원회를 둠(시행령에 규정된 상설 위원회)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 안을 검토, 위원회 안 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특정 사건에 한하여 심의하는 비상 설적 · 한시적 기구
구성 원자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 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정 및 위원을 지명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됨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명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 원 지명
위원 수	상설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 상임위원 회에서 정함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 성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 내지 5인의 위원으 로 구성	3인의 위원으로 구성	5인 이내

국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양형위원회
국회법상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됨(국회법 제57조 제7항)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 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 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구성위원 전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회의 공개 원칙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의 의사 공개 원칙 다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의 내용 공개 원칙 다만, 운영규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개 원칙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과정도 공개하지 아니함)	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 원칙 소위원회 또는 소수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표할 수 없음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함)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직무를 행함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본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사무처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위원장이나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직원인 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단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심의 종결 전에 전문위원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 요청 가능하고, 심의를 종결할 때 위원회에 그 결과 보고하며 심의 종결 전이라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보고